

국회 추석 전 추경안 처리 무산될 듯

한전 지원 등 절충 실패 한나라 표결 강행 안해

국회는 애초 합의 시한이었던 1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기업 지원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본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이틀째 국회 예결특위 소위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 보조금(1조2천550억원) 지원 문제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처리가 불발될 경우 단독 표결 처리라도 강행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이날 중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입장이 강경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특위 소위에서 에너지 공기업 보조 방식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난색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감안, '요금안정화 사업' 같은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신설해 기관이 아닌 사업에 우회 지원하되 해당 공기업의 자금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중산층 이하나 중소기업이 쓰는 전기료, 가스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금안정화 사업을 만들어 요금을 올리지는 않는데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속타는 특위 목마른 의원

11일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추경안 막판 절충 작업을 벌이면서 물이 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공기업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보조금이라는 본질에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퇴라고 규정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사업보조금 역시 기관에 직접 보조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보조금 전액 삭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공기업에 대한 추경지원은 선례도,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부풀려 보너스 잔치를 한 부도덕한 공기업에 대한 추경지원은 안 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

위정책회의에서 "불법한, 민생해결의 바른 대책이 못되는 공기업 보조가 아니라 대학등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7천600억의 예산 편성 등 그야말로 민생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기업에 대한 추경지원금 전액 삭감을 거듭 요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그것을 미리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것인데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적자를 계산해서 미리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것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상임위 주요 쟁점

국방위 "北 사태급변 가능성 있다"

정무위 소위원회 구성 사고 파행 법사위 유가환급금 개정안 마찰

국회는 11일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을 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등 각종 쟁점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이상희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에 따른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방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포스트 김정일' 상황에 대해 군의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조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군 경제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김 위원장의 동향에 따른 정보수집 강화와 전방 경제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유지하고 있

는 데프콘 IV단계를 III 단계로 격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김 위원장 유고시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경우의 수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 내부 갈등으로 인한 내란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한이 휘말리지 않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군의 직무 시스템과 대응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모든 사안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위는 애초 이날 국방부 업

무보고를 관례에 따라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정무위는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 것을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한 것이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 결과, 오는 18일까지 소위를 구성하고 의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택기 의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진행을 요구하고 나서 회의를 선포하고 다시 논의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벌였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간 대화 단절 오래가지 않을 것"

DJ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참석

김대중(DJ·사친) 전 대통령은 11일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 갈등을 빚고 있고 남북간 대화가 끊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참석차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스타방게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대화의 힘·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상호주의 대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6자 회담과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 어느 쪽도 대화를 단절하고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여전히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각각 이룩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수용하면 남북간의 대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대화를 통해서만 안전과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자 회담과 북핵 문제 전망에 언급, "6자 회담이 또다시 경색상태

에 있지만 북핵 문제는 결국 6자회담과 북미간 직접 대화, 주고받는 협상의 테두리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자 회담에 의해 핵문제가 해결되고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성하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항구적 평화 협력 체제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며 "이를 위해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빨리 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 후 열 마그네 북대미 전 노르웨이 총리를 면담했으며 14일 오후 귀국한다. /연합뉴스

지방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시동

민주당 특위 1차 회의...11월 말까지 당론 확정 계획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일정과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우윤근 제1조정위원장, 박기춘(경기도), 노영민(충청도), 이광재(강원도), 최철국(경상도), 김세웅(전라도), 김희철(서울), 강기정(행정안전위 간사), 최인기 의원(전 행자부 장관), 이상환 정책위 부의장 등 지역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17대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2~3차례 전문가 공청회

를 연 뒤 의원총회를 갖고 11월 말까지 당론으로 지방행정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별도로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특위 논의를 통해 내년에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서비스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체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아주 큰 안전이기 때문에 국회 내 별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신료 인하·전월세 소득공제 추진"

민주당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

민주당은 11일 이동통신요금의 가입비 폐지와 전·월세 임대차 소득공제 적용 등 12개 부문에 걸쳐 물가하락을 유도하는 내용의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는 고물가를 '52개 생필품 가격관리'로 잡겠다고 뒷북 정책을 편데 이어 추석을 앞두고는 기획재정부가 특별관리 품목을 지정했으나 실제 추석이 잘 쓰이지 않는 품종과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등 헛다리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12개 부문은 곡물과 곡물가공식품, 육류, 부동산 가격, 이동통신요금, 교육비, 사교육비, 전기·가스·대중교통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비료값, 사료값, 유류 등이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새로움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책특강

9월 16일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10월 6일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서울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학성진, 오치동 북부영성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09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이루세요 =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강좌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보 복 군 소 기 전 정 행 무 세 원 활 공 정 호 전 지 무 방 술 산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9월 16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총)회원, 1년(정)회원

합격시까지(장기)회원

※수강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9월 6일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험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 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